

무등산 관리, 광주시-국립공원관리공단 어색한 동거

공단 85명 인력배치... 동일 업무에 신경전 市 “공동관리 바람직”... 상생 대책마련 시급

국립공원 무등산의 관리권을 놓고 국립공원관리공단(환경부)과 광주시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한 건물에서 어색한 동거(同居)를 하고, 동일한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승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양 기관 직원간 신경전이 전개되는가 하면 무등산 관련 시민단체의 내부마져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상생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이하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일 동구 운림동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후 첫 공식 행사였으나, 광주시에서는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은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관보에 게재돼 공식발효된 날로, '생일'이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날이기도 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날 개소식과 함께 산불감시요원을 포함해 85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며, 원효사 지구 분소에 20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원효사에 파견된 직원들은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일주일 동안 대기해야 했다. 애초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기로 했던 광주시 산하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의 협조 미흡으로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마련된 사무실도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관공)로 협조해 나머지 직원은 외근 형식으로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시는 “기존 인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당분간 원효사사무소를 비워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같은 이중인력 배치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광주시 산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이하 광주시) 정규직 20명과 계약직 30명 등 50명을 대상으로 이직을 권고했으나, 모두가 거절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직을 거절한 이유는 ▲5년 후 전 국립공원순환근무 ▲정년기간 3명이 겨우 근무할 수 있을 정도(8명

건이 이유였다. 시는 남은 인력인 이들을 무등산 '주상절리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충장사, 충민사, 충렬사, 호수생태공원 관리, 무등산 공동 관리 업무 등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반면 광주시 본청의 경우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중 하나를 맡고있는 광주 도시재생과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생업무에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립공원 공단의 한 직원은 “관리권이 넘어오는데 따라 기존인력을 모두 고용

승계하려 했는데 무산됐고, 광주시의 업무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에서 공동관리 등을 주장하는 바람에 같은 업무를 양 기관에서 동시에 하는 등 기형상마져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 기관에서 맡고 있는 업무중 중복된 부분이 많으며, 무등산을 알리는 인터넷홈페이지마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불만이 높다. 광주시는 무등산의 경우 타 국립공원과 달리 도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공동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관리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무등산은 광주의 것”이라며 “관련 부서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일을 미루면 안 된다.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무등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89년 창립된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도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이후 내분에 휩싸였다.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로 양분된 무보협은 임원 선임 문제로 무등산 온천 개발 동조설 등을 놓고 충돌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독서동아리·도서관 전국 최하위

각각 31개·16개...市,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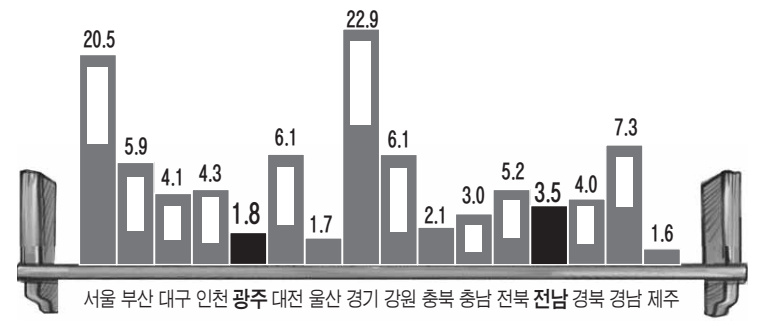
광주지역 독서동아리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광주지역 도서관 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에 그쳐 독서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전남지역의 도서관 수는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에 독서동아리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기준 광주지역 도서관은 16곳으로 전국에서 울산(11곳)에 이어 가장 적었다. 전남은 57곳으로 경기(169곳),

서울(109곳), 경북(60곳)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남지역 도서관의 지역민 1인당 장서 수는 2.34권으로 제주(3.27권) 다음으로 높았다.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은 6.1%로 3배 이상 많은 독서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남은 3.5%(62개)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기록했다. 독서동아리 문화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로 전국 독서동아리 가운데 47.7%(883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뒤를 이어 경남(7.3%), 강원·대전(6.1%), 부산(5.9%), 인천(4.3%), 대구(4.1%)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현재 17개 인 공공도서관을 3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단위:%>



■ 지역별 도서관·장서 현황

구분	도서관 수	1인당 장서수	강원	47	2.60
서울	109	0.87	충북	32	1.54
부산	31	1.07	충남	51	1.88
대구	27	1.17	전북	47	1.78
인천	31	0.95	전남	57	2.34
광주	16	1.30	경북	60	1.72
대전	22	1.40	경남	55	1.53
울산	11	1.04	제주	21	3.27
경기	169	1.61	합계	786	1.43

또 사이버테러? 인터넷망 마비에 공무원들 '긴장'

국가정보통신망 장비 과부하... 전체 복구

26일 오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인터넷망이 한때 마비되자 공무원들은 “사이버 테러를 당한 것 아니냐”며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다. 전남 관련 공무원들은 인터넷 마비에 따른 문의 전화를 받으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컴퓨터 중요 자료를 따로 복사해 놓는 등 종일 긴장감이 돌았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경부터 국가정보통신망에서 지자체로 연결된 장비에 과부하가 걸려 전남, 전북, 광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 8개 지자체 인터넷망이 마비됐다. 7개 지자체의 인터넷망은 40분 만에 정상화됐으며 가장 늦은 전남에서도 이날 오후 1시경 복구됐다.

초단체의 내부 행정망이 아닌 외부로 연결하는 인터넷망에서 발생해 민원인 불편은 크지 않았다. 광주시는 전남도에 비해 인터넷망이 비교적 빨리 복구됐지만 최근 방송사 등의 해킹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각을 곤두세웠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통신망 장애 요인이 해킹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중·일 FTA 반대 농민단체 공동기자회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시작된 26일 오전 회의장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일 FTA 1차 협상 개시

28일까지 3일간... 농민단체, 중단 촉구 시위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2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시했다. 한국 측은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관으로 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중국은 위지엔화(俞建華)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은 코지 쓰루오카(鶴岡 公二)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왔다. 1차 협상은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협상 범위, 협상 진행방식, 행정사항 등을 다룬다. 정부는 “민간한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5개 농민단체는 이날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앞에서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 국제연구기관 의 전망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만으로도 농업 생산액이 14.7% 감소해 한미 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업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한·중·일 FTA를 계속 추진한다면 대규모 결의대회 등 강력 협상 범위, 협상 진행방식, 행정사항 등을 다룬다. 정부는 “민간한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할 수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방문진 설립 후 첫 결정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26일 김재철(60) MBC 사장을 해임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을 결정한 것은 1988년 방문진 설립 후 처음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체 이사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없었다. 해임인 결의 사유는 ▲방문진의 임원 선진권 침해 ▲운영제도 위반 및 공직책임 방기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의 공직 지배제도 훼손이다. /연합뉴스

남성 조루 환자 대상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

조루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 1. 지원 요건**
 -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남성
 - ▶최소 6개월 이상 조루 병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
 - ▶6개월 이상 고정적인 이성 파트너 유지 (파트너 동의 필요)
- 2. 시험 참여 기간**
 - ▶약 14주간의 시험기간 동안 총 4회 방문 및 1회 전화확인
- 3. 참여시 제공사항**
 - ▶임상시험기간 동안 전문의료진에 의한 진료, 상담 및 임상시험과 관련한 검사 및 약물
 - ▶임상시험용 의약품
 - ▶소정의 교통비
- 4. 지원 마감일 : 2013년 4월**
(신청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5. 연구 기관 및 문의처**
전남대학교병원 비노기과 이미나 연구간호사

문의 **062-220-6710**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한약 · 국산 · 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활(땅두릅)모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광주결혼문화원

계림사거리 버스정류소 54, 39, 87, 160, 419

산정입구 계림초등학교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 19, 83, 180, 184

4, 19정류소 55, 98, 151, 518

호남직업전문학교

홍플러스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포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토인부동산개발 010-2475-0933 062)434-7000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인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상준환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관남로

대한생명 구.한미쇼핑 한제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2-2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바로 옆으로 이전

홍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신뢰/시간 평 일·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원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30-26호